전두환 오늘 '5·18 광주법정' 선다

재판부 경고에 입장 바꿔 출석
항소심 선고 피고인 없이 가능
마지막 광주행 될 수도
오월단체, 엄벌 촉구 침묵시위

전두환 출석 대비하는 법원 8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씨 출석에 대비한 안전울타리가 설치됐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9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전두환(90)씨가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이 전씨의 마지막 광주 방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측은 성명·연령·주거·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다 최근에야 입장을 바꿨다.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을 앞둔 8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에서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증거신청과 증인심문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지만 무릅쓰고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측 증거 제출·주장 등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씨측이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재판부 입장을 받아들여 법정에 출석키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 신청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선고까지 애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월 단체(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기념행사위원회)도 최근 회의를 열고 전씨 재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소법 365조 2항)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이 전씨의 마지막 광주행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씨측은 이날 재판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전씨 없이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오월 단체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재판 일정에 맞춰 오후 1시 전씨의 사과를 촉구하고 법의 심판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쪽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재판 시작 전부터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주변에서 전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침묵 집회도 연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하는 마지막으로 날로 보고 광주 지역민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집회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버스기사 극단 선택' 수사 본격화

유족, 북부경찰에 회사 간부·정규직 기사 고발

정규직이 되기 위해 회사 간부에게 돈을 건넸고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책임까지 떠안는 등 심적 부담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버스기사 〈광주일보 6월 23일 6면〉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숨진 버스기사 A씨의 유족측에 따르면 유족은 9일 광주북부경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A씨 회사 소속이던 정규직 기사 B씨와 회사 간부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유족은 A씨가 생전 남긴 휴대전화 녹취록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비정규직인 A씨가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되기 위해 같은 회사 정규직 기사인 B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이 회사 간부 C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증거자료를 보면 정규직 버스기사가 되고 싶었던 A씨가 청탁을 종용당했고 결국 이들에게 돈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들은 경찰 고발 이후 오는 12일 광주시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A씨의 죽음을 회사의 '갑질 횡포'로 인한 산업재해로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준비중이다. 노동계에서도 '사고보험료 떠넘기기' 행태가 고질적인 버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난 6월 1일 정규직이 된 A씨는 숨지기 3일 전부터 4차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떠넘기는 회사측 요구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고 피해자 측의 요구 금액도 커 홀로 매우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지난 6월 18일 나주지역 한 모텔에서 "미안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보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메모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측이 고발한 B씨와 C씨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A씨측 주장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간부 C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군 법 잘못 해석…태양광발전 불허 처분 제동

법원, 항소심서 사업자 손 들어줘

신안군이 관련 법을 잘못 해석,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태양광발전업자인 A씨가 신안군수를 상대로 낸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신안군은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9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뒤 그 건물 위에 998.4㎾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며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냈다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주민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신안군 결정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신안군 손을 들어줘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7조 3항 1호)상 '전기설비 건설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규정을 적용해 불허가한 신안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수용'(受用)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고 신안군 주장처럼 주민들 '수용'(受容) 정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신안군이 향후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를 들어 A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신안군이 해당 전기사업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A씨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신안군의 '무분별한 난개발' 및 '주민반대' 우려를 내세운 A씨에 대한 전기사업 불허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학동 참사' 등 재발 방지 법무부 '안전사고 TF' 가동

사건처리·피해자 지원 등 점검

법무부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같은 중대 안전사고의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TF에서 실효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꾸려졌다.

TF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찾는다.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하고, 적용 법률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도 오는 10일 진행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351	1	목포시 용당동 970-116 132㎡ 제시외 주택 등 52㎡[제시외건물매각포함]	대	80,782,360 80,782,360	일괄매각.감정서상다소의면적차이있으나,물적동일성인정되는범위내이므로공부상면적을적용함
		목포시 산정로232번길 7 단층58.51㎡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0타경 5984	1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1712 1층103호[현황아라솔301호1층][제3동] 51.4852㎡[공부상호[제3동1층제103호]와현황호[아라솔제1층제301호]표시상이[감정평가서참조]]	다세대	211,000,000 211,000,000	현황리조트단지내숙박시설로이용중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7461	1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148-2 3987㎡[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5,435,800 95,435,800	일괄매각.목록1현황일부전,일부묵전임.목록1,2지상위이동식컨테이너매각제외
		동소 148-3 1012㎡	대		
		동소 산102-2 7934㎡[물건번호1:지적경계불명하여정확한위치및경계는측량요]	임야		
2020타경 55507	2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33-5 1719㎡ 제시외 수목 1식[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02,323,000 202,323,000	목록2~3각수목포함매각.목록3현황과수원으로이용중
		동소 산42-13 294㎡ 제시외 수목 1식	임야		
2020타경 56203	1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722-14 1983㎡[토지중일부답으로사용중,일부는인접지와함께독립된저수공간가진큰규모의둠벙등으로이용중]	전	38,073,600 38,073,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조사서상지적경계불명하여측량조사필요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0타경 56487	1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398-1 1418㎡[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상소재수목포함매각.현황일부전,일부건부지로이용중]	전	18,311,850 18,311,85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399-4 99㎡[물건번호1:김선애지분1/2 전부.목록1,2각지상위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각매각제외]	대		
2021타경 290	1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98-1 3593㎡[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79,046,000 79,046,000	2021타경399[중복]
[자동차,중기]					
2021타경 50585	1	사용본거지:목포시 하당남부로 97 501동 1005호[옥암동 부영5차아파트] 등록번호:05도3245 차명:SM5 D 연식:2014[내외부관리상태보통,타이어및타이밍벨트점검요]	자동차	4,600,000 4,600,000	보관: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
2021타경 51472	1	사용본거지:목포시 청호로219번길 51 705동 702호[죽교동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등록번호:35어3715 기종:Touareg 3.0 TDI Blue Motion 연식:2014[관리상태보통,범퍼등외관긁힘등있어정비요함]	자동차	22,000,000 22,000,000	보관: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8. 23.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8. 30.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